

# 사후 보도자료

## 6.1 지방선거 관련 부산여성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5월 11일 (수)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공동주최 :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구세군샬리홈,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 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의집,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새길공동체누림터, 새길공동체양지터, 새길공동체해봄터, 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쉼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해뜨는집)

■ 제공일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담당 : 부산여성단체연합사무국 / bwau1999@hanmail.net / 051-802-6083

1.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로 구성된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연대체입니다.
3.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의 여성주권자들이 원하는 성평등 후보자의 조건 및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1, 발언문2

[붙임3] 사진

# **부산의 여성주권자들이 요구한다!**

## **6.1 지방선거 후보들은 성평등 부산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으로 임하라!!**

바로 어제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주인의 자리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자리는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성을 삭제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미투 운동 이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2021년의 보궐선거를 치루었지만 어느 정당도 여성들이 제기했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선거 시기마다 성평등 의제와 여성정책은 안중에도 없었다.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당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성별 균형과 여성할당제와 대표성 논의가 무색하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거대 정당의 부산 16개 구 군의 기초자치 단체장 후보는 4명에 불과하며 여당의 여성후보도 단 한 명도 없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아직 멀었듯이 부산의 성평등 실현도 아직 멀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 공직자의 성비위 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평등 정책을 통한 정치개혁과 성평등 정책 대결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의 여성주권자들은 지역의 여성현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평등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시 및 구군의 성평등 전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기 위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

**둘째,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확대 등 여성폭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라!**

**셋째, 여성의 일할 권리보장 및 채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고용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부산 성착취 집결지 폐쇄 및 여성**

## 인권 공간 조성하라!

다섯째, 부산성평등활동지원센터, 부산여성플라자 등 여성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 속 성평등 의제를 실현하라!

여섯째, 한부모 가족, 여성1인 가구,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여성청년,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여성주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일곱째,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 정규화, 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성평등을 실현하라!

선거는 승리만이 목표가 아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민의 절반인 여성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성평등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1일  
부산여성주권자 일동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구세군샬리흠,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 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의집,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새길공동체누림터, 새길공동체양지터, 새길공동체해봄터, 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쉼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해뜨는집)

## [발언문①] 6.1지방선거 부산의 여성주권자는 성평등 정책을 원한다!!!

(장명숙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푸르른 5월,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달력을 빼곡히 채운 가족 관련 기념일들, 바로 가정의달 5월입니다. 기념해야 할 날이 많아 이 날들을 불편해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 날들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입니다. 이들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의 끝은 다소 비극적이었습니다. 행복하길 바랐던 가정이 폭력과 상처로 얼룩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페미사이드. 최소 1.4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주변인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1일에 1명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우리사회가 살릴 수 있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2021년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집계한 상담통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건수는 62,920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여러 정책과 제도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피해가 있어도 갈 곳이 없고 정신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는 더더욱 갈 곳이 없습니다. 데이트폭력피해자는 성폭력피해가 아니라고, 가정폭력피해가 아니라고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행위자가 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고,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언젠가는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고,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행위자와 주변인에 의하여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해결점이 딱히 없습니다.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여성폭력에 무관심으로 일색하던 정치권에서 여성 표를 의식하며 고개 숙여 관심을 보입니다. 선거철에만 고개 숙이지 말고,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여성폭력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야 할 때는 선거철이 아닌 평소입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여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여성은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성은 안전한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성은 성폭력·성희롱과 2차 피해가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여성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치권의 역할은 '여성폭력 없는 사회,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부산상시협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발언문②] 성평등 노동 정책 (이정화 사)부산여성회 사무처장

2022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성평등 노동 실현은 지방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성차별은 너무나 심각하지만 개선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간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경력단절예방법 등을 제정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통계 집계 이래 계속 OECD 1위를 놓친 일 없는 성별임금격차와 굳건한 유리천정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6.1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자체에서는 과연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중요한 과제인가, 행정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등의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자체는 여성고용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모집채용 및 고용 전반에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 없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 여성,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특히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 정부의 정책이 빈 곳을 찾아 지방 정부가 이를 잘 메꿔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범사용자로서의 지자체를 확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마스터플랜을 실시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이며 지방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있기도 하다. 정책적 방법으로는 성평등 공시제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성평등 공시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성평등 공시제를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제정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여성 일자리와 고용평등이 연계되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세 번째 성평등노동정책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여성노동자가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겨져 왔다. 최근 들어 지방 정부에서 일자리 혹은 노동관련 직제를 신설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은 매우 허약한 현실이다. 지역에서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수이다. 시장 직속의 성평등 정책관 신설, 성평등 노동팀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배치를 통해 성평등노동 정책을 개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일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부산의 여성주권자로 성평등노동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